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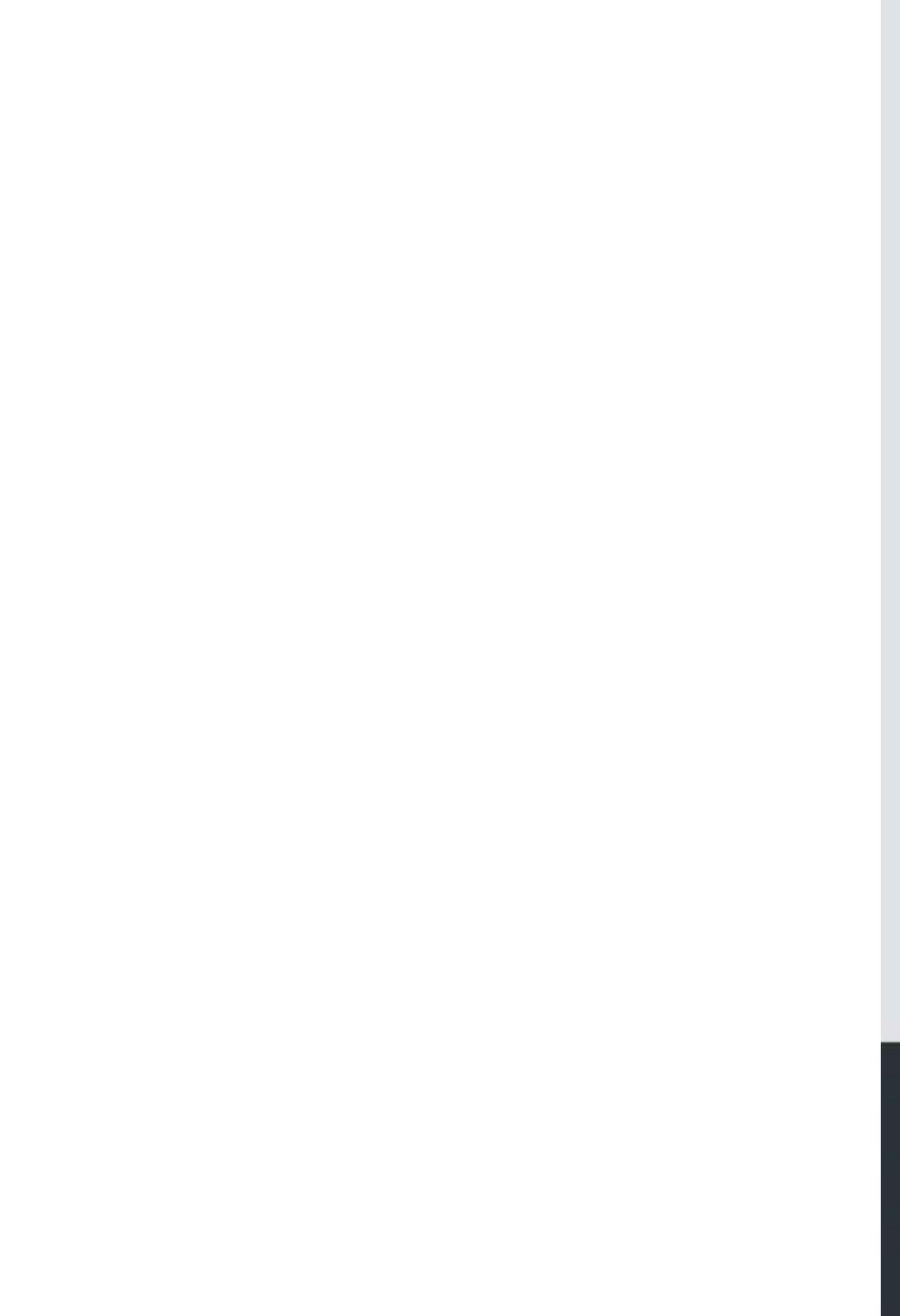
2012년 총대선,

민주노총 정치방침 비판

10문 10답



민주노총 정치방침 비판





2012년 총대선,

민주노총 정치방침 비판

10문 10답



민주노총 정치방침 비판

2012년 총대선, 민주노총 정치방침 비판 10문 10답

1. 통합진보당이 한계는 있지만 민주노동당을 이어받은
진보정당으로 봐야 하지 않나? 04
2. 현실적으로 민주노총의 요구를 국회 내에서 대변하기
위해서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08
3. 진보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야권연대를 통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고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13
4. 한나라당·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바꾸
기 위해서 공동정부 참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
가? 17
5. 안철수 교수가 대안인가? 21

글 읽는 순서

6.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은 왜 실패한 것인가? 25
7. 통합진보당에 대거 가입해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29
8. 이후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운동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32
9. 정당과 노동조합의 올바른 관계는 어떠해야 하나? 37
10.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막기위해 무엇
을 해야 하나? 40



통 합진보당 대의기구에서 민주노동당 지분이 55%이고, 새진
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세력)까지 합하면 70%가 넘는다
고 합니다. 한계는 있지만 민주노동당을 이어받은 진보정당으로 봐
야 하지 않나요?

진보정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힘과 정치방침에 따라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건설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많은 조합원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건설 과정은 어떻습니까? 민주노동당을 해산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노동당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맘대로 당을 해산하고 국민참여당과 통합했습니다.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을 염원하는 노동자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건설된 정당을 어떻게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려는지 살펴봐야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탈당한 노회찬-심상정-조승수로 대표되는 새진보통합연대', '노무현의 삶과 참여정부 계승을 목표로 창당한 국민참여당'이 통합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겠다는 진보정당과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자유주의 정당이 합쳐진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할 수 없습니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찬성하거나 통합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진보세력의 당내 지분이 70%가 넘는다는 것을 근거로 진보진영이 국민참여당을 흡수 통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당내 지분이 아닌 정당이 표방하는 이념과 가치, 정책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력이 누구냐입니다. 이를 살펴보

면 통합진보당이 왜 진보정당이 될 수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사라진 통합진보당

첫째,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조운동의 오랜 투쟁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도,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가치도 표방하지 않습니다.

2012년 1월 13일 통합진보당이 출범과 함께 밝힌 5대 비전은 ①나라의 주권 확립 ②복지국가 건설 ③한반도 평화와 통일 ④생태주의 사회 지향 ⑤한국정치의 변혁입니다. 5대 비전만 보면 민주당과 뚜렷한 차별성이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당내 지분 55%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지향은 5대 비전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명에서도 ‘노동’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민주노총이 제안하여 구성한 ‘진보대통합 연석회의’(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13개 단체로 구성)에서 2011년 5월 31일에 최종 합의한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한다.’는 내용조차 통합진보당의 5대 비전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왜 없냐’는 질문에 통합진보당은 5대 비전 중 두 번째 ‘복지국가 건설’ 속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노동을 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정책을 생각하는 것은 ‘노동 유연화(비정규직 확대)를 추진하면서 복지정책으로 보완하겠다’는 신자

유주의 정책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국민참여당의 입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통합 이전 국민참여당은 ‘재벌해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충하는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노동정책을 앞세우고 이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어 노동자정당, 노동조합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거나, ‘과건제 철폐, 지역자립형 경제,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등 적실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 적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 동안 진보정당이 견지했던 핵심 가치들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5대 비전은 이러한 국민참여당의 입장이 상당히 수용된 것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의견을 담지 않은 통합진보당

둘째,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건설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라는 정치방침을 실천하기 위해 인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을 해산하는 중요한 순간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는 과정에도 조합원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을 돈과 표를 대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돈과 표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고하는 정당,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을 염원하는 노동자들의 열망을 담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정신과 노동자 중심성을 명확히 하지 않는 정당을 진보정당이라 볼 수 없습니다.



민 주노총 집행부는 진보신당, 사회당도 있지만 통합진보당이 가장 확실한 대안적 진보정당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노총의 요구를 국회 내에서 대변하기 위해서는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노동자들의 대중적 투쟁입니다. 당선을 위해 원칙을 잃어버린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내부의 단결을 확대하고 여타의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노동자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면 지지율 올라간다더니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민주노총 집행부는 진보정당이 위기라며



“2012년 총선, 대선에서 한국정치지형이 보수 양당체제로 굳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통합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한 언론과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의 통합진보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 12월 5일 출범 후 10% 넘게 지지율이 올랐다가 연말 여론조사에선 1~3%대, 최근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4.5%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지율이 연속 2주 한나라당(30.6%)을 앞서고 있습니다(민주통합당 지지율 33%).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통해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민주(통합)당과의 반MB 야권연대를 통해 원내 교섭단체 수준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존재감마저 상실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자신의 원칙과 정체성을 약화시킬수록 민주통합당

과의 차별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큰 민주통합당의 지지율만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집행부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자유주의 정당으로, 양당 체계가 굳어지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총선후보 선출도 원칙이 없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총선후보 선출에도 원칙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전 지부장이 통합진보당 울산 남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입니다.

이경훈 전 지부장은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 점거 농성을 하던 당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게 ‘선 농성 해제, 후 단체교섭’ 압박 △현대차 비정규노조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징계 최소화로 축소 △외부세력 논란을 통한 비정규직 고립화 △농성 해제 압박을 위한 음식량 통제 등의 만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경훈 전 지부장은 비정규직 조합원을 교육하기 위해 공장에 들어 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게 지부 허락 없이 들어왔다며 ‘외부세력’으로 비난했습니다. 결국 사측에서 주거침입죄로 고발해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이경훈 전 지부장은 모른척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은 “이경훈 현대차 전 지부장, 비정규직들 파업할 때 뒤에서 어떻게 그들을 생겼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훈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치를 떨었다”고 후일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진보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창원 을과 울산의 통합진보당 현직 시도의원들도 시도의원을 사퇴하고 총선에 나섰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당원총투표를 거쳐 이들을 예비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총선 출마를 위해 시도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세금 낭비를 유발하고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비판해 왔습니다. 심지어 민주통합당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 사퇴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내 민주노동당 출신 인사들은 “정당은 도덕적 시민운동과는 다르다”며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선 사퇴를 하고서라도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선을 위해 자신이 내세운 원칙조차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통합진보당의 행태를 볼 때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한다면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에서 자신이 견지했던 노선과 원칙을 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당면한 총선에서 운동적 원칙도 저버리고, 현실적 영향력도 장담할 수 없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에 목맨다면 민주노총마저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가능성이 큼니다.

민중운동의 원칙과 과제에 동의하는 정당, 세력 다시 모아야

민주노총은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가치와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노동자 민중운동의 원칙과 중심을 분명히 하고 그 위에서 외연을 넓혀야 합니다. △한미FTA 폐기 △노동악법 철폐 및 전면 개정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 중단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 △초국적 자본 규제 등 핵심 투쟁과제를 명확히 제기하고, 이러한 가치에 동의하는 정당, 정치세력과 함께 총선방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무원칙한 통합진보당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내부의 단결과 여타 민중운동과의 연대를 통한 대중 투쟁을 만들어내야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투쟁력도, 진보정당 지지율도 미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 전면 개정이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한미FTA 폐기 등 민주노총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야권연대를 통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고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주통합당이 계승한다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원칙한 야권연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죽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상층 로비에 기댄 야권연대가 아닌 노동자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힘이 없는 민주노총은 언제라도 버려진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치적인 환경변화(여소야대,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전성기를 맞이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대중

적 투쟁계획은 세우지 않고 야당과의 정치협상, 야권연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1년, 민주노총은 수많은 대중 집회를 개최했지만 조합원을 주체화시키고 투쟁동력을 키우지 못한 1회성 정치적 동원집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MB 반한나라당 야권연대를 통한 상층 협상에만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이 아닌 반MB 반한나라당 야권연대를 제1 과제로 삼고, 신자유주의 보수야당인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를 진행하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악법 개정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 한미FTA 비준저지 투쟁 등 매 현안에서 원칙 없는 양보와 후퇴를 반복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형식적 합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자체의 투쟁동력과 진보민중진영의 역량에 근거하여 투쟁을 이끌지 못하고 야권연대를 통한 상층협상만 바라보면 정치적 계산법에 따라 언제라도 소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일례로 2011년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무원칙한 반MB 선거방침에 근거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재벌·기업 친화적인 주류 시민운동 출신의 박원순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선본/선거운동 결합, 정치후원금 조직)하고 정책협약(서울시 공기업 해고자 복직, 노동복지센터 건립지원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정협의회 구성이 핵심 합의 내용)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 약속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자 복직문제는 선별 복직(일부복직)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노동복지센터(30억 예산배정)의 경우, 박원순 시장은 민주

노총 서울본부와 합의해 놓고도 각 구청 공모 등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운영주체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노총에게는 2012년 30억 예산을 조건 없이 배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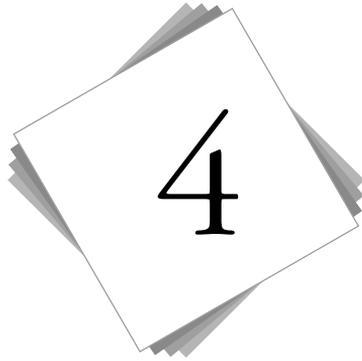
언론은 박원순 시장이 2800명의 서울시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 계약직)화 할 거라고 떠들었지만 정작 박원순 시장은 경총과 보수 세력 반발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와 교섭구조를 만든다는 구상 아래 노정협의회 구성을 합의했지만, 서울시는 별도의 노정협의회는 힘들다며 노사정위원회의 서울시 버전인 노사민정 협의회에 들어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뒷간에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는 옛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96~97년 노동법 개악에 맞



선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의 전신) 국회의원 1백 명이 막지 못한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과 안기부법 날치기를 총파업으로 철회시켰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 투쟁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치적 목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중 투쟁을 통해 노동자 민중운동, 진보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무원칙한 야권연대’ 선거방침으로 현장 조합원들을 신 자유주의세력인 민주통합당-주류 시민운동의 들러리로 동원한다면 투쟁은 사라지고 좀 더 영향력 있는 보수정당에 대한 로비와 상층 협상에 의존하는 경향만 늘어날 것입니다. 노동 대중이 아래로부터 스스로의 요구와 투쟁을 조직하여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이러한 대중 운동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배질서를 변혁하여 생산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민 주노동당은 통합진보당 출범 이전부터 2012년 대선에서 민 주(통합)당과의 공동정부 수립을 현실적인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한나라당·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공동정부 참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요?

통합진보당이 말하는 공동집권, 혹은 민주연립정부수립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말이 좋아 공동집권이니, 사실은 민주당 정권에게 노동과 진보의 명분을 상납하고, 장관직 몇 개를 구걸하는 정부참여 전략일 뿐입니다. 이는 노동자운동이 자유주의 정부의 행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지지하는 동원부대로 전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노동 집행부와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는 것을 진보적 정권교체(진보집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몇몇 진보인사들이 들어가면, 신

자유주의 정책의 강력한 집행자였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진보적 정권이 될 수 있었다는 허황된 주장과도 같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민주통합당과의 연합을 통한 집권을 ‘진보적 정권교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 직후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핵심 요직을 선뜻 통합진보당에 내어줄 가능성도 낮습니다. 설사 그렇게 정권이 교체되어 통합진보당 출신이 장관 한 두 자리를 한다고 해도 득보다는 실이 큼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유럽 재정위기를 필두로 세계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수출 중심의 재벌 기업들은 생산 감소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를 거부할 생각이 없는 집권세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터져 나오는 대중의 불만을 막을 것입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소수 세력으로서 집권세력 내부에서 권한은 거의 없지만, 민주통합당-주류 시민운동의 반노동자적 정책의 책임은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경제위기 하에 체제유지를 위해 노동자 투쟁을 탄압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당선의 들러리로 전략한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운동의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결국은 민주통합당에게 팽 당하거나 노동자 민중운동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통합당과의 공동정부 수립이라는 허울 좋은 유혹에 기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다르다”는 주관적 의지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 안에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어 반민중정



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정권을 바꾸고 보자”는 얘기는 “이명박, 한나라당 체제 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설사 민주통합당의 집권이 한나라당의 재집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손 치더라도 민주통합당 인사들 자체가 한미FTA 체결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든 당사자들이고, 기업들의 정치후원을 받아 활동하는 정당인들입니다. 선거 때마다 ‘앞에서는 친서민, 뒤에서는 친재벌’하는 신자유주의 정당의 당선을 위해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힘을 길러야 하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계급적 원칙, 변혁적 원칙을 밑바탕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 근 안철수 교수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가 높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정권을 교체하기 한 유력한 대안으로 안철수 교수를 꼽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대안인가요?

안철수 교수는 대안이 아닙니다.

막대한 꽃아도 한나라당이 당선된다면 '농현' 신드롬을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보여주는 키워드는 '이명박·한나라당에 대한 환멸'과 '안철수에 대한 환호'입니다. 2012년 1월 10일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대선주자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교수가 51.4%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9.0%에 그쳤습니다. '비호감 정당'을 묻는 조사에

서는 한나라당이 일등을 했고(41.5%),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6.8%(12월 마지막 주 조사)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5년 전으로 시계 바늘을 돌려보면, 지금 나꼼수의 ‘가카’ 신드롬의 자리에 ‘놈현’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능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극에 달해 ‘막대기만 꽂아 놓아도 한나라당이 당선된다’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환호의 대상에서 환멸의 대상이 되었고, 대중은 ‘안철수 교수’라는 새로운 환호의 대상을 찾았을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과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통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운동 세력에 대한 믿음과 희망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적이고 착한 기업가’에 대한 대중의 주관적 욕망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안철수 현상’은 근본적으로 2007년 이명박 후보에 대한 환상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사상과 경력 어디를 살펴보아도 그가 한미FTA 체결, 노사 관계 선진화방안 및 비정규약법 통과, 노동탄압 등을 추진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 보다 노동자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이라는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 검증된 바도 없고 정치적 기반 또한 불분명한 '착한 기업인 안철수'에 대중의 막연한 환호는 그가 권력에 앉는 순간부터 서서히 절망과 분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가 이명박 정권을 불러들였듯이 말입니다. 새로운 정치인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환상과 그 환상이 배신당했을 때 극심하게 표출되는 원한과 분노는 정치에 대한 환멸만을 낳을 뿐입니다.

신자유주의만이 대안인가?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단순히 정치인들의 무능이나 부패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정치위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정치인들은 대중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고 약속하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좌파, 우파 모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체제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 복지, 환경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배계급들은 'TINA'(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다!)를 외치며 경제위기 상황을 빌미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했습니다. 노동자민중에게 신자유주의 정책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 통치 스타일은 조금씩 달라도 금융화와 규제

완화, 부동산 투기, 민영화(사유화), 노동 유연화 등 자신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는 똑같았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와 금융소득을 통한 자산소득은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과 실업자는 확대되고 실질임금은 감소했으며 노동자민중의 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정권교체에도 노동자민중의 권리가 축소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해방과 평등세상 건설이라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치와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친재벌 반노동,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보수정당과 자유주의정당에 대한 헛된 기대에 배신당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대중적 투쟁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은 민주노동당 건설로 2004년 10석의 원내 진출과 20%를 넘는 지지율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통합으로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시행 이후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지지율 8.1%를 확보하며 제3당의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총선에서 정당지지율 13%를 확보하여 국회의원 10명을 당선시켜 제3당의 지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해온 민주노동당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외형적 성공의 이면에는 지역 당권 장악을

위한 위장전입, 당비 대납, 집단 주소 이전 등 소위 ‘자주파’의 비민주적 행태와 권력 독점, 노선 갈등 등 내부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지지기반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민주노총 상층과의 정치협상을 통한 지원 획득(세액공제, 득표)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2004년 총선에서 10명이 의회에 진출한 이후 국회 안에서 뭐든지 해결하려는 ‘의회주의’ 성격이 강화되었습니다. 당의 인력과 재정이 의정지원 쪽에 심하게 편중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좋은 시절에 신자유주의에 맞선 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을 풍부히 하지 못하고, ‘대중운동의 활성화와 연대의 확장’을 위한 운동 전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과 입법 활동에 주력하면서 스타 정치인에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은 2007년 권영길 대표가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과정과 그 해 11월 중앙위에서 당내 다수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6표제 비례대표제 선거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사건을 계기로 드러납니다. 급기야 17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참담한 패배 이후 일부 세력은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진보신당을 창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해온 민주노총으로 이어져 다수 조합원들이 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원칙을 잊은 진보정당,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 이후 양당 모두 기존 민주노동당의



부정적 모습만 확대시켰습니다. 분당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활동가들이 분리되고 이탈하기도 해 지역운동에서 진보정당의 역할은 작아졌습니다. 그나마 운동역량이 상대적으로 두터운 서울지역에서조차도 활동역량이 축소되었고 이 역량마저 선거대응에 쏠리면서 지역운동 조직화는 잊혀졌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정치적 입장이 동일한 진보정당의 전략적 공조보다는 영향력 있는 신자유주의 야당과의 공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민주노총이 내세운 진보운동, 진보정당의 통합이라는 당초의 목표마저 잊어버린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가장 큰 지지기반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하고 통합까지 했습니다.

진보정당운동이 노동해방과 평등세상 건설이라는 노동자 정치세

력화의 가치와 원칙을 저버린 데는 민주노총의 책임이 큼니다. 민주노총이 정치사업을 ‘국회의원 배출’과 ‘정당을 통한 입법사업’에만 국한하면서 조합원들을 돈 내고 표 찍는 수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합원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고 학습과 투쟁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확대하는 노조다운 정치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않은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자신의 대중적 투쟁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약해지다 보니 진보정당들이 민주노총을 무시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통 합진보당이 한계가 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거 가입해
서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고,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늘리면 되
지 않을까요.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나요?

87년, 우리 손으로 바꾼 것들을 기억하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애시 당초 자신의 지지기반인 민주노총 조합원을 철저히 무시한 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조차 손쉽게 접어버린 통합진보당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통합진보당의 5대 비전에는 노동해방과 평등세상 건설이라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치와 원칙이 없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새진보통

합연대(진보신당 탈당세력)가 당내 지분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과정에서 그 동안 진보정당이 표방했던 가치와 원칙은 대폭 후퇴했습니다. 당면한 총선에서의 의석 확보만을 위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마저 저버린 채 급조된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과의 노선적 차별성도 모호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영향력이 큰 민주통합당의 출범과 함께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개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 전망 논쟁을 되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는 ‘한국노총 민주화론’과 ‘제 2노총론’이 대립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90년 ‘평등사회 앞당기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건설했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견지하고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평등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어용 한국노총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전노협이라는 새로운 민주노조 단결의 구심을 건설한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정당에 노동자들이 많이 가입한다고 진보정당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도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나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에 입당하는 전술을 펴지 않고 독자적인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민주노동당-을 건설했습니다.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이 아닌 노동자들의 힘으로 만드는 새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민 주노총 내부에서 향후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전망에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민주노동당을 통한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저버린 통합진보당의 출범으로 그 실효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대중적인 운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서 민주노총의 올바른 정치방향을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본래의 의미를 찾자

먼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노동자 정치세력

화'는 노동운동이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 정당정치세력과는 다르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운동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자 정당 혹은 진보정당운동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말은 본래의 의미, '계급적 단결을 통해 노동해방, 평등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운동'과 '변혁적인 노동자정당', '계급동맹의 실현을 위한 전선운동'을 포함하는 운동 전략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 노동자민중운동, 진보운동은 구체적인 운동 전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동대중(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이 스스로의 요구와 투쟁을 조직하여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이러한 대중운동(계급동맹)의 힘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배질서를 변혁하여 생산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대체로 공유해왔습니다. 또한 운동진영의 이념과 전략은 조직노선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회변혁운동(사회주의운동, 민족해방운동)에서 자본주의와 국가를 변혁하는 과정에서 당과 노조, 전선체는 조직노선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자본-임금노동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수인 노동자 대중의 계급적 단결과 농민, 빈민, 학생 등 여타 대중운동의 계급동맹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재벌(자본)-보수-자유주의정당-관료집단의 강고한 동맹을 깨뜨리고 사회적 관계를 변혁하기 위한 사회 세력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선거를 통한 집권은 가능할지 몰라도 구조의 변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서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상층연대에만 몰두하는 왜곡된 전선운동이 아니라 계급동맹을 목표로 한 전선운동이 필요합니다. 민중연대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중적, 계급적 기반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강력한 대중운동이 정당의 우경화를 막는다

한편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는 자본주의 체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장치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대중들은 정당만이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선거 공간 및 선전 활동에서 정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보장’ ‘국고보조 및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정당은 쉽게 선거주의, 의회주의에 경도되고, 체제 내부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의회주의와 선거주의로의 경도를 우려해 제도정당을 거부할 경우 고립주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회적 영향력을 이유로 ‘제도정당’만을 생각할 경우 선거주의, 의회주의에 빠져 당초 운동의 원칙과 목표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치와 원칙을 저버리고 다수의석 확보를 위해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민주노동당이 그 예입니다. 강력한 대중운동이 있어야 노동자정당 혹은 진보정당의 우경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진보정당 운동,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실패가 주는 교훈입니다.

‘민주노동당을 통한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원칙을 저버린 통합진보당의 출범으로 그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체성이 모호한 통합진보당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관철하려 합니다. 우선 민주노총 집행부의 무원칙하고 패권적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철회시켜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대중적인 운동을 전개합니다. 조합원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서 민주노총의 올바른 정치방침을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을 투쟁의 구심으로 세워내자

민주노총 내부에는 향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두고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진보신당을 포함한 좌파진보정당의 재구성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새로운 변혁적 노동자대중정당의 건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노총의 힘이 제대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야당-시민운동과의 상층 협상 중심의 활동과 단절하고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의 구심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토론하고, 합의를 모아 ‘노동해방과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다시 건설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는 노동자들의 대안이 아닙니다. 역사적으

로 존재했던 사회주의의 오류는 비판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해방과 인간해방, 여성해방을 목표로 삼았던 사회주의적 지향은 계승해야 합니다. 노동해방과 평등세상 실현이라는 사회주의적인 지향과 가치를 명확히 하면서 그 동안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해 반성하고 제대로 된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자 계급정치를 위한 전략을 만듭시다.



민 주도총 내부에는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배타적 지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당과 노동조합의 올바른 관계는 어떠해야 하나요?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에 반대하는 주장의 핵심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과 배타적으로 돈 대주고 표 몰아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해당 정당은 가만히 있어도 노조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는 관점을 상실하고 조합원들을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과 노조의 관계는 정치적 대리주의를 만연시켜 정당과 노조 모두에게 나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노동조합 내부에 다양한 정치적 경향이 존재하는 데 특정 정

당만을 지지하면 다른 입장을 가진 정당·정치세력들의 정치활동을 억압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노동조합이 가진 조직적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지 않으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힘이 빠지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통일된 방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배타적 지지에만 있지 않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정치적 대리주의의 문제는 ‘배타적 지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치적 대리주의 문제는 노조와 정당의 이념과 노선, 운동전략 등이 함께 움직인 결과입니다. ‘배타적 지지’ 철회만으로 정치적 대리주의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대리주의는 이념과 노선을 포함하여 노조운동, 정당운동, 전선운동 전반을 아우르는 운동 전략의 재구성을 통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둘째로 ‘배타적 지지’라는 개념이 갖는 함정이 있습니다. ‘배타적 지지’ 철회가 정치적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자칫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축으로서 ‘변혁적 노동자정당’을 추진하는 전략 수립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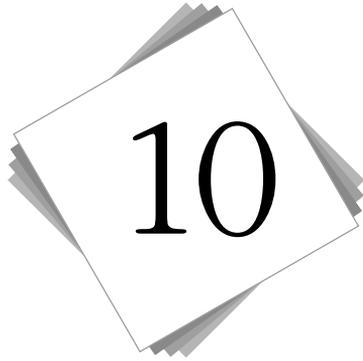
이는 정세적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입니다. 보수정당과 자유주의정당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내부의 합의와 결의를 통해 노동해방과 평등세상 건설을 위한 무기로서 ‘변혁적인 노동자대중정당’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자정당에 돈 대주고 표 찍는 정치적 대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독립적으로 조합원을 정치적 주체로서 성장시키고 노동자정당을 운동적, 변혁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노조의 제대로 된 운동전략, 투쟁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실패한 조건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특정 정파의 패권일 뿐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무기인 민주노총마저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컨대 지난 1999년 8월 민주노총 15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정치방침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르주아 보수정당이 아닌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제 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이 참여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주노총은 제 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제 정치조직과 연대, 지지, 지원을 강화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의 결정에 의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아니라 진보적이고 계급적인 노동자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침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향후 민주노총의 대중적 투쟁력을 만들면서, 실패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새롭게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민 주노총 집행부는 1.31 대의원대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정치방침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막아냅시다.

충분히 토론하자!

최근 민주노총 내부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두고 첨예한 갈등과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정당 통합 사업이 본격화됐던 2011년 내내 상층 차원의 논의만 잠시 있었을 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토론과 의견수렴과정은 없었습니다. 조합원들은 기자회견 보도를 보았을 뿐입니다. 잇따른 문제제기에 전조직적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12월 28일 공문을 발송하여 한 달 만(연말 연초, 설 연휴 등 포함)에 지역별 토론결과를 보고서로 취합하기로 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가 충분히 수렴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내부를 갈등과 분열로 내몰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대의원 대회 안전통과를 위한 형식적 토론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결정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결정하기까지도 3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정치방침은 그 중요성으로 볼 때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란 일반 의결원칙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일례로 공공운수노조·중집에서는 충분한 조직적 합의를 통한 단결을 위해서 2/3 의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 총의를 모이지 못하고 일방의 의사를 관철한다면 조직적 힘이 모아질 수 없습니다. 과거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방침을 결정할 때 일부 이견이 존재했지만 ‘만장일치’를 이끌어 냈던 이유도 조직적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렸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관철하려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일방적 행보 때문에 민주노총의 총선-대선 투쟁 논의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를 관철시키는 계기로 삼으려면, 각 정당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대중투쟁에 근거해 압박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직후 민



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연맹과 합의한 사항을 반복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에서 보듯이,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거나 약속서를 쓴다고 해서 민주노총의 요구가 곧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교섭의 구체적인 합의사항조차 노조의 힘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파기하는 것이 자본의 행태입니다. 표를 구걸할 때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하고 당선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기존 정당·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노조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는 노동자의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정치방침으로 민주노총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란 말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수많은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과 헌신으로 건설한 민주노총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김영훈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노총의 조합원이라면 누구라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주노총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관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노총의 단결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조합원들의 힘과 지혜에 달려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 www.pssp.org

이메일 | pssp@jinbo.net

전화 | 02-778-4001~2

팩스 | 02-778-4006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 사회운동의 사상 이념의 재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민중적 대안의 모색,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혁신을 주요한 기치로 1998년 출범하였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운동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 이론 정책연구, 교육사업, 연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